

“제조업 부흥 르네상스 전략 마련을”

문 대통령, 산자부 업무보고서

“4차 산업혁명, 미중 무역분쟁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 산업정책 부재 비판 목소리 정부에 빠이른 자성 필요 주력산업 회복, 제조업 혁신 등으로 경제 반드시 제도약”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의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 해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통주력 산업을 되살리고,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산단 등으로 제조업을 혁신하고 고도화 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반드시 제도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 참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1일 교 육부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이후 일 주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산업은 4차 산업혁명, 미중 무역분쟁 등 급격한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와 성장 잠재력 저하 등과 맞물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제조업 강국들은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우리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지켜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대·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경제적 양극화와 자동차·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어려움 등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반도체 등에 편중된 산업 구조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미래 먹거리 부재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산업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직면한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 성장을 산업정책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제조업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선과 자동차 등 지역 중심 산업이 무너질 경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이 함께 무너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산업 정책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정부에 빠이른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름이 돋았는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에 관해 “뚜렷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며 “현재 직면한 주력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고도화 하기 위한 단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우리 산업이 지향해야 할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에 맞춰서 장기 전략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국민과 기업에게 우리 산업이 어디를 향하고자 하는지 그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우리 사회의 담론으로 삼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마련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노동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손잡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와 상생형 모델을 만들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발표한 협력사 상생방안,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지원 등을 열거한 문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며 “자동차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근본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존의 산업발전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제조업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켜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무주 안성파출소 새롭게 지어진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 예산 4억7700만원 확보

노후하고 협소해 경찰공무원은 물론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무주군 안성파출소가 새롭게 지어진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무주경찰서 안성파출소 신축을 위한 예산 4억7,700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안성파출소 신축은 2019년 국유재산 관리기금으로 반영됨에 따라, 전액 국가예산으로 추진된다.

안성파출소는 지난 1985년 건축돼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는 물론, 근무 중인 경찰관에 비해 청사가 비좁아 사무 및 민원인의 상담에 어려움

을 겪어왔다. 안성파출소는 부지 685㎡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며, 내년 안에 신축이 완료될 전망이다.

안호영 의원은 안성파출소 신축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예산을 국유재산관리 기금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안 의원은 “안성면 주민의 권익에 부응해 파출소 신축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신축 파출소는 주민이 종전보다는 편리하게 민원을 상담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도 나은 환경에서 치안업무에 매진하는 등 안성면 치안서비스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고창 동호항 ‘어촌뉴딜300’ 선정

평화당 유성엽 의원, 사업비 112억8400만원 확보

유성엽 의원(경음·고창, 민주평화당)은 18일, ‘어촌뉴딜 300’ 사업에 고창 동호항이 최종 선정되어 2019년도 사업비 112억 8400



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를 맞아 주요 어촌 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

기 위해 추진하는 생생 밀착형 SOC 사업이다.

내년에 시범사업지구 70개소를 선정하며, 그 중 고창의 동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사업기간 2019~2020년의 고창 동호항 노을미항 어촌뉴딜 300은 포구정비, 어업활동 편의시설 등의 어항현대화 사업과 노을센터, 수산물 동굴장터 등의 특화사업, 연계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진성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피감기관 해외출장 요구 거부권 신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주부터 시행
갑질 행위 개념 명문화... 5가지 분류분류 위반시 처벌
갑질 행위 신고자 신원 공개·신분상 불이익조치 등 금지

갑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의 도화선이 됐던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공무원의 해외출장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 금지와 갑질 행위 금지 등 크게 2가지 조항을 신설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외출장 부당 지원 요구 금지 조항은 갑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체를 계기로 사퇴 압박을 받았고 결국 물러났다.

이후 권익위는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을 벌였다. 국회의원 38명 등 총 261명의 공직자가 최근 1년 6개월 동안 피감기관 내지는 민간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요구를 거

부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권익위는 이러한 관행을 공무원 사회에서 만연하는 ‘갑질’이라 판단했다.

개정안 제14조2항1호에는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감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피감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지는 2호에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계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당한 해외출장 요구 뿐만 아니라 과잉 의견을 비롯해 행사와 연수 등 폭넓게 이뤄지는 부당한 지원을 요구할 수 없고, 요구받은 공직자는 이를 즉시 거부할 수 있는 의무를 공무원 행동강령에 담은 것이다. 일종의 대응 ‘가이드 라인’인 셈이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했다. 갑질 대상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새롭게 반영

했다.

권익위는 갑질 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일’로 규정했다.

갑질 행위의 유형으로는 대상에 따라 공무원→국민,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국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가지로 분류했다.

가령, 시청 공무원 A과장이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휴일 등에 업무를 지시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떠넘긴다면 공무원→하급기관에 대한 갑질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직무를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하면 공무원→공무원 갑질에, 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의 업무를 전가하거나 비용·인력 부담을 요구하면 상급기관→하급기관 갑질에 각각 해당한다.

갑질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강화됐다. 상위 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행동강령에도 적용해 누구든지 갑질 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조치 또는 근무조건에 차별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각급 공공기관들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신고 사건도 모니터링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학재 의원, 바미당 탈당 선언

바른미래당의 3선 중진급인 이학재 의원은 18일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며 “자유한국당에 들어가 보수의 개혁과 통합에 매진하겠다”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박근혜정부의 좌초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당을 떠나 무너진 보수를 되살리고자 하였으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국민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며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뉴시스

전북개발공사는
토지개발 등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임대주택 등 공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도모합니다.

명익을 찾는 미래공간 창조
전북개발공사